

‘통합특별시’ 명칭·청사 소재지 놓고 ‘의견차’

양부남, 광주·전남 땀 전남…전남광주 땀 광주 교차 제안
강기정 “판도라 상자 열면 끝없어”…김영록 “특별법 집중”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과 주 청사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명칭·청사 ‘빅딜’ 절충안을 제시한 반면, 시도지사는 특별법에 답을 자처와 재정, 특례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논의에 이견을 보였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18명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2차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 이후 명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

은 ““광주전남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를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방안이 어떨까 한다”며 “이 부분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통합 명칭을 둘러싼 상징적 갈등을 청사 위치 문제와 연계해 풀어보자는 제안으로, 광주 중심 통합에 대한 전남 지역의 경계심과 광주시 위상 약화 우려가 맞물린 최근 논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도당위

원장은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전남,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광주라는 발상은 일종의 ‘빅딜’로 볼 수 있다”며 동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균형을 고민한 제안”이라며 “지금은 작은 차이를 놓고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통 큰 단결과 통 큰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명칭과 청사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시장은 “어디에 사무실을 둘 것인가, 명칭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 빠져들게 된다”며 “지금은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권한을 어떻게 이양받을 것이냐, 특례로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도 “도민 공청회를 가면 여러 욕구가 분출해 (명칭 등) 작은 이야기도 나온다”며 “그런 것보다 특별시가 됐을 때 제도, 조례를 수용해 모든 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단체 명칭을 광주가 앞에 있는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기로 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답을 예정이다.

광주전남특별시는 그 아래 광주 5개 자치구와 22개 전남 시·군을 두는 27개 시·군·구 체제다.

하지만 이 같은 명칭을 두고 광주와 전남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신안군 도민공청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신안군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 국립의대 정원 100명 유력…2030년 첫 입학

복지부, 의사 양성 규모 논의…지방대 정원 감안

지역의사제 병행…이르면 내달 3일 최종 확정

전남에 신설될 국립의과대학의 정원 규모가 100명으로 가닥이 잡혔다. 입학 시점은 2030년이 유력하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남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했다.

보정심은 의사인력 공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미래 의사 부족 시나리오 가운데 6개 모델을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당

모델들은 2037년 기준 의사 수가 2530명에서 최대 4800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담고 있다. 이는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5,015~1만1136명으로 봤던 기존 추계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 같은 추계를 토대로 정부는 2030년 입학이 예상되는 공공의대와 전남 신설 국립의대의 정원을 각각 100명으로 설정했다. 공공의대는 이재명 정부의 보건 의료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다. 졸업생은 국립중앙의료원, 국

립재활원, 소방·경찰 의료기관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전남에 들어설 신규 국립의대 역시 정원 100명 안팎으로 정리됐다.

올해 기존 지방 국립대 의대의 모집인원 이 학교별로 최소 40명에서 최대 142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전남은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다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정부는 2027~2031학년도 의대 전체 정원 규모를 산정할 때, 2037년까지 공공의대와 전남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의사 600명을 미리 제외하기로 했다. 보정심이 선택한 6개 추계 결과를 반영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선발해야 할 의대 정원은 총 1930~4200명, 연간으로는 386~840명 수준이다. 현재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경복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3일 의대 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용인반도체 전력 어디서?

“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이대통령, 설득·유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가 옮겨지고 옮겨지느냐?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와서 뒤집나.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한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라며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한강 수계에 그것도 용수 다 쓰면, 수량이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 어떻게 할 건가. 지금 0.9밖에 여유분이 없는데…”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 송전할 때 대적으로 만들어 송전하는 게 안 된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다.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생산 지구는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요금 차등제가 발생

하면 저기 남쪽은 (요금에) 싸질 것”이라며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먹는 하마인데, 에너지 없는 데 비싼 거기에 있겠다. 제가 보기에 는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산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는)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훨씬 가치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인프라 구축도 많이 해주고, 교육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 주고, 사람들 정주 환경도 많이 개선해 줄 테니까 차라리 거기로 가는 게 나중엔 장기적으로 낫다’고…”라고 말했다.

또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이면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난한 일이라는 한데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뚝뚝 바꾸는 거라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추정 재반영

농업경영비 상승 고려…지난해 감액된 도비 50% 지원키로

전남도는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2025년 정리추경에서 도비 50%를 감액 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2004~2014년)와 추곡수매제도 폐지(2005년) 등 변화된 농정 환경에서 농업인단체의 손실 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 1465억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으로 쌀값 안정 체계가 강화되고 국가주도의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전남도와 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해 올해부터 농가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그러나 최근 농가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정환경 변화에 따라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에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도 전남도의 입장을 수용하고, 농업인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을 위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

▶1면 ‘광주 자율주행’서 계속

원본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 스쿨존과 주택가 실증, 원격관제와 무인차 안전기준 등 기존 제약으로 막혀 있던 실험이 대폭 허용된다. 지자체가 규제특례 신청의 주체가 돼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프라 지원도 전면에 내세웠다.

자율주행 전용 차랑에서 발생하는 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참여 기업 간 상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에 구축된 대규모 GPU 자원을 활용해 AI 학습을 지원한다.

관제와 보험 체계도 손질한다. 24시간 실증을 전제로 한 운행·관제·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과 일반보험을 결합한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한다. 사고 원인에 따라 제조사, AI, 관제 책임을 나눠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남도 공무원 56% “행정통합, 줄속 추진”

설문서 56.8% ‘성급’, 주민투표 필요 71.8%

찬성 40.6%에도 “공론화 부족” 우려 우세

전남도청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성급하고 졸속’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8%가 현재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26.5%)까지 포함하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현 추진 방식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21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252명사(57.2%)이 응답했다.

통합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이

40.6%로 가장 많았지만, ‘유보’(36.8%)와 ‘반대’(22.6%)를 합치면 신중론 또는 부정적 입장이 과반을 넘겼다.

통합을 찬성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지방자치권 강화 및 재정 증대’(71.1%)가 가장 많이 꼽혔고, ‘대형 국책사업 및 기업 유치에 유리’(38.9%)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부족과 졸속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 우려’가 72.7%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고착’이라는 답변도 59%에 달했다.

통합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다. 7월 이전 추진에 찬

성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다. 이는 지방선거 이전 마무리를 전제로 한 현재 일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응답자의 71.8%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무원 대상 의견수렴과 설명여부에 대해서도 ‘부족했다’거나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75.8%에 달했다.

행정통합이 근무 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3.0%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는 “행정통합이 충분한 준비와 공론화 없이 속도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공식사회 인식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향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통합 추진 시기와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